

주간 통일정세

2018-11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3.10	유엔 사무총장 “북미정상회담 환영...지도력 칭찬”(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 거론 스웨덴 “북미대화, 돕겠다”(연합뉴스)
	3.12	“한미훈련·북핵실험 동시 중단해야...24일 평화춧불 들자”(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3.15	北패럴림픽 선수·대표단 귀환...평창계기 北인원 방남 마무리(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2018. 3. 12.

■ “한미훈련·북핵실험 동시 중단해야···24일 평화촛불 들자”(연합뉴스)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중단하자고 시민단체가 주장함.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0여 시민단체가 모여 꾸린 ‘324 평화촛불추진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남북미 당국이 천신만고 끝에 이룬 합의를 확고하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함.
- 추진위는 한미 정부에 한미연합연습 등을 중단·축소하고 경제·외교적 제재·압박도 신뢰 구축을 위해 중단하라고 주문했으며, 한국 정부에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 정부에는 한반도 평화협정·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통한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를 요청했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고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며, 남한에 대한 핵·재래식 무기 사용 금지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함.

나. 국제사회

2018. 3. 10.

■ 유엔 사무총장 “북미정상회담 환영···지도력 칭찬”(연합뉴스)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다가오는 최초의 북미 정상 회담을 환영하고 회담 개최 합의에 고무됐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이날 밝힘.
-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5월까지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미국과 북한의 합의 발표에 고무됐다”면서 “그는 모든 관련된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비전을 칭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준수와 일치하는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 거론 스웨덴 “북미대화, 돕겠다”(연합뉴스)

- 스웨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 후보 가운데 한 곳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10일 북미 간 대화를 돕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함.
- 룩셈부르크를 방문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함.
- 그러면서 뢰벤 총리는 스웨덴이 요청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북미 대화를 도울지에 대해 앞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함.

2. 남북 교류협력

2018. 3. 15.

■ 北패럴림픽 선수·대표단 귀환·평창계기 北인원 방남 마무리(연합뉴스)

- 평창동계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방남했던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 24명이 15일 오후 북한으로 돌아감.
-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28분께 경기 과주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 출경 심사를 마친 후 1시 5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함.
- 선수들은 경기를 완주한 소감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열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은 하지 않음.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3.10	조선신보, 북미정상회담에 “美전쟁소동에 종지부 찍는 담판”(연합뉴스)
	3.11	北학술지 “핵보유국 된 우리, 경제건설 총집중 조건 마련”(연합뉴스)
	3.12	北신문, 정상회담 언급없이 내부 ‘사상교양전’ 독려(연합뉴스)
	3.13	北, 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지원중단에 항의 편지(연합뉴스)
	3.16	北매체 “리용호, 스웨덴 방문…상호 관심사 의견교환”(연합뉴스)
군사	-	-
경제	3.16	VOA “북중 접경지역 물류 이동 급감…민간위성 포착”(연합뉴스)
사회 문화	3.16	북한도 습지보전 랍사르협약 가입…문덕·라선 철새보호구 지정(연합뉴스)
외교 국방	3.10	백악관 “트럼프,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으면 김정은 안만나”(연합뉴스) 北신문,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도 美 제재 비난(연합뉴스)
	3.11	트럼프 “북, 미사일 도발 중단 약속 지키리라 믿는다”(연합뉴스) 트럼프 “북한은 화해 원해…가장 위대한 타결 불지도”(연합뉴스)
	3.13	맥매스터 “외교해법 낙관하나 北 ‘비핵화 행동’까지 최대 압박”(연합뉴스) 北매체, 트럼프 지칭 ‘美 집권자’ 표현…비난수위 조절?(연합뉴스)
	3.14	北신문, 美제재 또 비난…“정세역전 음흉한 목적” 주장(연합뉴스)
	3.15	유럽의회 “3년간 북과 14차례 비밀대화…가까운 미래에 또 회동”(연합뉴스)
	3.16	결핵·말라리아퇴치 세계기금 “투명성 높여야 대북지원 재개”(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3. 13.

■ 北, 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지원중단에 항의 편지(연합뉴스)

- 북한 당국자가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하 세계기금)의 최근 대북 지원중단 조치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형훈 북한 보건성 부상은 피터 샌즈 세계기금 집행국장에 게 지난 10일 보낸 편지에서, '현 주기 세계기금의 협조를 2018년 6월 30일까지 종결하게 된다'는 내용의 지난달 22일 자 편지를 마크 에딩턴 세계기금 자금관리 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함.
- 김 부상은 "급작스러운 이번 협조중단 조치를 기금 측이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협조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도주의 협조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비판함.
- 그는 "결핵,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사업에서 일정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현 단계에서 기금 측이 그 후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조중단을 통지해온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처사"라며 "이제라도 인도주의 사명에 맞게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힘.

2018. 3. 16.

■ 北매체 "리용호, 스웨덴 방문··상호 관심사 의견교환"(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용호 동지와 일행이 스웨덴을 방문하기 위하여 15일 평양을 출발하였다"며 "방문 기간 리용호 동지는 마르고트 엘리자베스 발스트롬 스웨덴 외무상을 만나 쌍무관계와 호상 관심

- 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게 된다”고 보도함.
- 북한 관영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이같이 전하면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부상 최희철 동지와 마르티나 아버그 소모기 주조(주북) 스웨덴 임시 대리 대사가 전송했다”고 밝힘.
 - 앞서 스웨덴 외교부는 리 외무상이 15~16일 이틀간 스웨덴을 방문해 발스트롬 외교장관과 회담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북한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국민의 보호권한을 가진 스웨덴의 영사 책임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우선 의제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임.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3. 10.

■ 조선신보, 북미정상회담에 “美전쟁소동에 종지부 찍는 담판”(연합뉴스)

- 조선신보가 10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분단의 주범인 미국이 일삼아온 북침 전쟁 소동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는 평화 담판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회담, 전쟁소동의 종식과 평화 담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최강의 승부수를 띄웠다’며 이같이 평가함.
- 신문은 북미정상회담 배경과 관련, “그동안 트럼프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조선(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내비쳐 왔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 무력 충돌을 피하고 핵보유국 조선과 대화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변함.
- 그러면서 “최고사령관(김정은)은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 대통령(트럼프)에게 역대 전임자들이 되풀이한 실책에서 벗어나는 방도를 제시하고 결단을 촉구하게 된다”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 온 조선반도(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의 구조를 대담하게 허무는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언급함.
- 신문은 “지금 세계는 조선(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이 초래한 국제질서의 대변동 과정을 보고 있다”고 덧붙임.

2018. 3. 11.

■ 北학술지 “핵보유국 된 우리, 경제건설 총집중 조건 마련”(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파격적 대외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이른바 ‘핵보유국’이 되면서 경제건설에 ‘총집중’할 조건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남.
- 연합뉴스가 11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 2017년 제4호는 ‘우리 당의 병진노선은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노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이런 주장을 담았음.
- 이 논문은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전쟁 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밝힘.
- 논문은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 건설을 동시에 다 같이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라고도 주장함.

2018. 3. 12.

■ 北신문, 정상회담 언급없이 내부 ‘사상교양전’ 독려(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2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차게 나래 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하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들 정신을 바탕으로 해 나가야 할 일들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변)에 철통같이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가자”고 밝힘.
- 이 신문은 “지금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은 엄혹하며 우리 조국은 사상최악의 역경을 단독으로 강행 돌파해 나가고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제재압살책동을 극대화하고 무모한 핵전쟁 도발책동에 매달리며 최후발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상정신력’을 강조함.
- 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사회주의 조선의 믿음직한 역군, 앞날의 주인공들로

키우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라며 “새 세대들을 진짜배기 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그들이 백두의 혈통, 충실성의 전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3. 16.

- VOA “북중 접경지역 물류 이동 급감…민간위성 포착”(연합뉴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의 민간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지난달 11일과 14일, 27일 북중 접경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조중친선다리’의 북한 쪽 도로에서 포착된 컨테이너 트럭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지난해 1월께 신의주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다리 앞 도로와 물류창고로 보이는 건물 주변에 트럭들이 뺏뺏하게 들어섰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난 11일 촬영된 민간위성업체 플래닛의 위성사진에서도 나타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엔 수십 대의 트럭이 육안으로 확인됐지만 이날 사진에서는 더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함.
- 미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 선임고문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와의 통화에서 “신의주에서 (트럭의)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사실은 최근 중국이 공개한 무역자료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힘.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8. 3. 16.

- **북한도 습지보전 람사르협약 가입...문덕·라선 철새보호구 지정(연합뉴스)**
 -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북한의 람사르협약 가입 사실을 공개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170번째 협약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힘.
 - 사무국이 지난달 6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5월 16일부로 정식 람사르협약 가입국이 될 예정임.
 - 북한은 평안남도 문덕 철새보호구와 함경북도 라선 철새보호구 등 2곳을 ‘람사르 지역’으로 지정한 상태이며, 문덕 철새보호구는 서쪽 해안과 맞닿은 청천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적 보호를 받는 지역이고 라선 철새보호구는 동북쪽 두만강 하구의 라선 경제특구에 있으며 중국·러시아 국경에서도 가까운 지역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3. 10.

■ 백악관 “트럼프, 북한의 구체적 조치 없으면 김정은 안만나”(연합뉴스)

-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것”인데,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는 그러한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의 말과 수사에 일치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볼 때까지 이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행동을 봐야 한다”고 언급함.
-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희망적”이라며 “우리가 아는 것은 최대의 압박 작전이 분명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작전이 북한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안다”며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물러서거나 그 작전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北신문,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도 美 제재 비난(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0일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저들의 자막대기에 따라 선과 악을 가르고 정의와 진리를 짓밟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군사적 힘도, 제재와 봉쇄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밝힘.
- 신문은 최근 미국이 56개 대상을 제재하는 해상차단 성격의 대북제재를 가한 것을 거론하며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또 “(미국이) 우리와 조금이라도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는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하였고 그것이 잘 먹어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그 나라를 대상으로 단독 제재를 발동하였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치를 비난함.
- 이어 “문제는 미국의 제재와 봉쇄책동이 전쟁을 동반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것”이라며 “그들은 제재와 봉쇄책동으로 우리나라를 고립 질식시켜 무력하게 만든 다음 쉽사리 타고 앉으려 하고 있다”고 강변함.

2018. 3. 11.

■ **트럼프 “북, 미사일 도발 중단 약속 지키리라 믿는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이 100일 넘게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 이행을 믿는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28일 이후로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나는 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언급함.
-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대북특사단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는 5월 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음.

■ **트럼프 “북한은 화해 위해…가장 위대한 타결 불지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이슈와 관련,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화해를 원한다고 본다”면서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비핵화 의지를 밝힌 걸 옹기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내가 자리를 곧 뜰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다면 앉아서 세계 및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불지도 모른다”고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이 많은 언론 앞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그건 오바마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를 믿어라, 오바마는 그걸 할 수도, 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밝힘.

2018. 3. 13.

■ **맥매스터 “외교해법 낙관하나 北 ‘비핵화 행동’까지 최대 압박”(연합뉴스)**

-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면서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오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북미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공유한 뒤 “안보리 이사국들도 외교적 해법 추구하고 북한의 언행이 일치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12일 비공개회의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건전한 의심’(healthy skepticism)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 성과를 위해 노력하되 북한이 말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제재·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북매체, 트럼프 지칭 ‘美 집권자’ 표현…비난수위 조절?(연합뉴스)

- 북한의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됨.
- 노동신문은 13일자 6면 ‘미국이 쏘아올린 무역전쟁의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최근 미 집권자가 자국이 수입하고 있는 철강재에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며 “만일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경우 미국을 시장으로 삼고 있는 서방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 철강재 및 알루미늄 제품 생산업체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함.
- 기사의 내용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관세가 세계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 패거리’ 등의 격한 표현 대신 ‘미(美) 집권자’라는 상대적으로 점잖은 표현을 쓴 것이 눈길을 모았음.

2018. 3. 14.

■ 북신문, 美제재 또 비난…“정세역전 음흉한 목적” 주장(연합뉴스)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4일 ‘긴장 격화를 노린 비열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최근 미국이 해운·무역회사, 선박 등 56개 대상에 제재를 가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최근의 반공화국 제재 강화를 통하여 정세 역전이라는 음흉한 목적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신문은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조치 발표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흐리게 하는 한편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를 환영하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데로 돌려보려는 술책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난함.

- 이어 “결국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발악하는 평화 파괴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놓았다”며 “미국의 제재소동은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3. 15.

- 유럽의회 “3년간 북과 14차례 비밀대화···가까운 미래에 또 회동”(연합뉴스)
 - 영국 출신인 니리 데바 의원이 이끄는 유럽의회의 한반도대표단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3년간 북한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과 14차례 접촉해왔고, 가까운 미래에 브뤼셀에서 또 다른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함.
 - 데바 의원은 “유럽의회 한반도대표단은 검증하는 북한과의 핵문제를 둘러싼 대치를 끝내기 위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해왔다”면서 대표단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하는 대화를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만나왔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고, 그들은 우리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측에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핵폭탄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브뤼셀의 외교소식통은 “데바 의원이 밝힌 한반도대표단과 북한 측의 접촉은 주로 영국 주재 북한 대사와의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대표단은 그동안 남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 되면서 방북도 이뤄지지 않았고, 장관급 인사교류도 없었다”고 언급했으며, 또 “EU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대외관계청(EEAS)이 총괄하고 있고 북한과의 접촉이나 협상도 EEAS 주도로 이뤄진다”면서 “유럽의회 한반도대표단의 대북활동에 대해 EEAS에서 큰 의미를 뒀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함.

2018. 3. 16.

■ 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투명성 높여야 대북지원 재개”(연합뉴스)

- 최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이하 세계기금)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대북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세계기금의 시스 페이존 수석 공보관은 15일(현지시간) VOA에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재개되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훨씬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보장,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세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내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총 1억3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VOA는 전함.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3.11		CNN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결정은 한국의 외교적 묘책 덕분”(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고 싶대요…전임자들 30년간 못한 일”(연합뉴스)	
	03.12		“이방카, 문대통령 내외 취미까지 연구…트럼프의 메시지 전달”(연합뉴스)	
			한미, 10차 방위비분담 철회의서 입장차 확인…“힘든 협의될듯”(연합뉴스)	
	03.13		북美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연합뉴스)	
	03.14	강경화, 美국무장관 교체 소식에 “급작스러운 변화”(연합뉴스)		
	03.16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연합뉴스)
				미 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철수시 김정은 승리의 춤출 것”(연합뉴스)
		‘방미’ 강경화 “남북·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분수령”(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3.10		中, '차이나패싱' 지적에 "비핵화가 더 중요...주변화 우려안해" (연합뉴스)
		정의용 "비핵화목표 진전에 中도움 커"...양제츠 "대화해결" 강조 (연합뉴스)	
	03.12		中외교부장 "시주석 양회 때 정의용 접견해 강한 비핵화 의지"(연합뉴스)
		시진핑 "남북화해·북미대화 지지"...정의용 "국빈방한 요청"(연합뉴스)	
			시진핑 "비핵화·평화안정에 주력하면 한반도에 꽃피는 봄 올 것"(연합뉴스)
	03.13		中외교부, 5월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중요한 역할 할 것"(연합뉴스)
		전직 6자회담 수석대표들 "북핵 완전한 신고와 검증이 중요"(연합뉴스)	
	03.14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 채널 재가동...한·산둥성 교류회(연합뉴스)	
			中언론 "韓외교력, 한반도 평화 회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연합뉴스)
	03.15		인민일보 "현재 한반도정세 방향, 中노선과 같다"...中역할론 강조(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3.12	서훈 국정원장, 고노 외무상 면담...방북·방미 결과 설명(연합뉴스)	
	03.12	아베 "비핵화 전제 北과 대화 평가"...서훈 "한일협력 중요"(연합뉴스)	

	03.15	한일 '2+2 안보정책협의회' 도쿄서 열려...동북아 안보환경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03.14	정의용, 러 외무와 회담...“남북·북미정상회담 성공 위해 공조”(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3.10		中철강업계, '눈에는 눈'...美 농산품·전자제품에 보복조치 촉구 (연합뉴스)
	03.11		중 상무부장 “중미 무역전쟁은 모두에 재난”...“경제대화 지속” (연합뉴스)
	03.14	“트럼프, 63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예정”(연합뉴스)	
		中, 트럼프의 대중 관세·투자·비자 압박 검토에 “결연히 반대” (연합뉴스)	
		中외교부, 美국무장관 교체에 “북미 대화에 영향 없기를 희망”(연합뉴스)	
		미중, 이젠 금융 마찰?...中펀드 자금회수vs中은행에 돈세탁 경고 (연합뉴스)	
03.15		트럼프 관세폭탄에 '일전'의지 다진 中언론 “무역전쟁 대비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3.11	EU·일-미국, 철강 고율관세 면제 합의 실패...“내주 계속 논의”(연합뉴스)	
	03.12		日관방 “아베, 방미시 트럼프에 납치문제 해결협조 당부할 것”(연합뉴스)
	03.13	日호위함, 美핵항모 칼빈슨과 남중국해서 공동훈련...“中견제”(연합뉴스)	
	03.14		日 ‘틸러슨경질’ 당혹...“아베-트럼프 신뢰로 미일동맹 변화없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3.13	美하원 정보위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캠프-러시아 공모 없었다”(연합뉴스)	
		틸러슨 “‘스파이 암살시도’ 독성 물질은 러시아제...英 조사 신뢰”(연합뉴스)	
	03.15	“미국, 러-중 제안 한반도 화해 지지 안보리 성명 초안 거부”(연합뉴스)	
		미국도 러시아 때리기...“그들은 뉴욕서도 화학무기 쓸 수 있다”(연합뉴스)	
	03.16	미, ‘대선개입·사이버공격’ 러시아 개인·단체 추가 제재(연합뉴스)	
미·영·독·프 정상 공동성명, 러시아에 스파이 사건 해명요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3.15		美에 당한 日, 韓·中에 화풀이?...“일부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03.13	일·러 영토분쟁 섬에 미국 기업이 발전소 건설 계획(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3. 11.

■ CNN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결정은 한국의 외교적 묘책 덕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놀라운 결정은 그간 미국이 이행해온 ‘최대 압박’ 전략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민첩한 외교적 묘책들에 촉발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10일(현지시간) 전·현직 미 관리들과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함.
-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특사 방남을 포함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촉발된 외교적 공세를 언급하면서 트럼프의 결정을 끌어낸 것은 “지난 3주일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함.

■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고 싶대요…전임자들 30년간 못한 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전략이 효과를 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를 전임 정부의 실패와 현 정부의 성공이라는 구도로 차별화함.
-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후보 선거지원 유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하는 한반도 긴장완화 흐름, 남한의 북미 간 중재외교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AP 통신이 전함.
-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 문제는 “우리가 가진 최대 난제”라며 “남한(인사들)이 북한을 갖고 우리는 매우 매우 강한 제재와 그 밖의 많은 일을 내가 취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속했다”고 말함.

2018. 03. 12.

■ “이방카, 문대통령 내외 취미까지 연구…트럼프의 메시지 전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지난달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취미까지

꼼꼼하게 사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남.

-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방카 보좌관은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미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기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한반도 핵위협은 물론 문 대통령 부부의 취미에 이르기까지 ‘질문 폭탄’을 퍼부었다고 함.
- 한국행 비행기 내에서 관련 보고서를 여러 시간 동안 탐독한 것은 물론 방한 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조우 가능성에 대해 참모진과 미리 시나리오를 점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는 북한 관료가 악수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포함돼 있었음.

■ 한미, 10차 방위비분담 첫회의서 입장차 확인...“힘든 협의될듯”(연합뉴스)

- 한미는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주 열린 첫 회의에서 액수, 유효기간, 제도 개선 등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 방위비 협의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방위비협정 개선을 위한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며 각자 밝힌 입장에는 액수, 기간, 제도개선 등 3가지 실무적인 요소들이 포함됐다고 소개함.
- 외교부 당국자는 “탐색적, 초보적 의견교환이었다”면서도 “굉장히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2018. 03. 13.

■ 북美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함.
- 회사 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힘.

- 그러면서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어 “본 관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관정의 반덤핑관세를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2018. 03. 14.

■ **강경화, 미국무장관 교체 소식에 “급작스러운 변화”(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격적인 미국 국무장관 교체 결정이 있었지만 대북정책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나온 미국 국무장관 교체 소식에 대해 “급작스러운 변화”라면서도 ‘향후 한미간 조율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없을 것 같다”고 답함.
- 강 장관은 이어 “상대국 인사 조치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긴밀하게 (한미간 공조 체제를) 유지해 왔으니 새 인물(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이지만 긴밀히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힘.

2018. 03. 16.

■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 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한 30분짜리 연설이 담긴 음성 녹음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으며, 이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천 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덧붙였다.

■ **미 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철수시 김정은 승리의 춤을 출 것”(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에 대해 “그(김정은)는 승리의 춤을 출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 한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어 “우리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파기한다면 그(김정은)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방미’ 강경화 “남북·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분수령”(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한미 간 조율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미 의회를 방문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상 공화) 등 외교통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최근 우리 대북특사단의 방북·방미 결과 등 최근 한반도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를 공유함.
- 강 장관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미 간 공조를 계속 긴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함.
- 강 장관은 또 미국의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확대·강화 일로에 있는 한미 경제·통상관계 자체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전반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함.

나. 한·중 관계

2018. 03. 10.

■ **정중, ‘차이나패싱’ 지적에 “비핵화가 더 중요…주변화 우려안해”(연합뉴스)**

-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차이나패싱’(중국 배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중국

언론매체들은 자국의 ‘주변화’는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함.

-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0일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을 통해 이런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 신문은 우선 “한반도 정세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중국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국 인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평정심을 갖고, 굳은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2018. 03. 12.

■ 정의용 “비핵화목표 진전에 中도움 커”…양제츠 “대화해결” 강조(연합뉴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에 중국의 도움이 크다고 밝혔고,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비핵화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 자리에서 양 국무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한 관계가 개선 및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중국에 보내 관련 상황을 통보하도록 했으며 이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함.

■ 中외교부장 “시주석 양회 때 정의용 접견해 강한 비핵화 의지”(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2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양회(兩會·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힘.
- 왕이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정의용 실장과 만찬을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간 조속한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함.
- 왕 부장은 이어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한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입장과 한반도 인민의 근본 이익, 그리고 국제사회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시 주석이 ‘의지가 있으면 어떤 일도 성사될 수 있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듯이 한중 양측이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정 실장의 방중에 감사를 포함.

■ 시진핑 “남북화해·북미대화 지지”…정의용 “국민방한 요청”(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민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자고 밝혔으며, 이에 정 실장은 시 주석에게 한국을 국빈방문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함.

-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며 “북미 대화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힘.

■ 시진핑 “비핵화 평화안정에 주력하면 한반도에 꽃피는 봄 올것”(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2일 방중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접견하고,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목표에 주력하면 한반도가 꽃 피는 봄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힘.
- 1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실장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 양측의 상호 관계 개선과 화해 및 협력 추진 그리고 북미 대화,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함.
- 시 주석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대화 기회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이 포함된 국제사회는 중국이 제기한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에 각국의 유익한 제의를 결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음.
-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통해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 실장이 중국에 대해 한국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중국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감.

2018. 03. 13.

■ 中외교부, 5월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중요한 역할 할 것”(연합뉴스)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미대화를 중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오는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함.
- 루 대변인은 우선 “북한과 미국 등 모든 유관국이 담판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로 복귀하는 긍정적 추세에 대해 중국은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대화와 접촉이 조속히 재개되길 원하고 성과를 조속히 얻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 그는 이어 “대화와 접촉에 도움이 되고 조속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형식과 안배도 고려하고 격려할만하다”면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전직 6자회담 수석대표들 “북핵 완전한 신고와 검증이 중요”(연합뉴스)

- 4~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추진되면서 장기 교착상태였던 북핵 해결 프로세스의 재개를 앞둔 가운데, 북핵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과 전면적인 핵·미사일 신고,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
- 2006~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것이 문제”라며 “핵 포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함.
- 천 전 수석은 “앞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과정에서 북측이 말하는 비핵화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인데, 비핵화 조치와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 간에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그것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직접 확인받게 중요하다”고 밝힘.

2018. 03. 14.

■ 중국 지방정부와 경제협력 채널 재가동…한·산둥성 교류회(연합뉴스)

- ‘사드 보복’ 이후 중단됐던 중국 지방 정부와의 경제통상협력 채널이 재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국 산둥성 지방정부와 ‘제2회 한·산둥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교류회는 올해 산업부가 중국 지방정부와 처음으로 개최하는 협의체임.
- 이호준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교역·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한중 산업협력단지·지방경제협력 시범구를 활용한 협력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함.

■ **中언론 “韓외교력, 한반도 평화회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연합뉴스)**

-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며 한반도 정세 완화에 큰 역할을 한 한국의 외교력에 대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는데,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평론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한국의 외교력이 한반도 평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함.
- 이 신문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중을 언급하며 “정 실장은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을 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면서 중국의 노력 역시 높게 평가했다고 전함.
-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의 ‘회오리 외교’가 비핵화에 관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면서 “한국의 외교는 성공적이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고 말함.

2018. 03. 15.

■ **인민일보 “현재 한반도정세 방향, 中노선과 같다”…中역할론 강조(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5일 사설격인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의 방향은 중국이 제기한 노선과 같다”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함.
- 이 신문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불가를 위해 노력했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대북 압력이 제때 담판의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전함.
- 인민일보의 이런 견해 표명은 5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 간 전화통화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중 이후 나옴.

다. 한·일 관계

2018. 03. 12.

■ **서훈 국정원장, 고노 외무상 면담…방북·방미 결과 설명(연합뉴스)**

-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일본을 방문,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고노 외무상을 만나 최근 방북과 방미 결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 각각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고노 외무상을 만나 최근 방북 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결심 과정 등을 설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힘.
 - 고노 외무상은 “설명에 감사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경주해 온 한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현 상황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라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2018. 03. 13.

■ 아베 “비핵화 전제 北과 대화 평가”...서훈 “한일협력 중요”(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설명차 방일 중인 서훈 국정원장을 총리 관저에서 만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함.
-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2018. 03. 15.

■ 한일 ‘2+2 안보정책협의회’ 도쿄서 열려...동북아 안보환경 논의(연합뉴스)

- 외교부는 15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하는 제11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렸다고 밝힘.
- 회의에는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유계 슈지(弓削州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차석대표를 맡았음.
-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과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 정부는 특히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일본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함.

라. 한·러 관계

2018. 03. 14.

■ 정의용, 러 외무와 회담…“남북 북미정상회담 성공 위해 공조”(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한 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함.
- 이날 중국에서 모스크바에 도착한 정 실장은 공항에서 곧바로 시내 외무부 청사로 이동해 오후 5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에는 러시아 측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한반도 문제 담당 특임대사 등이, 한국 측에선 우윤근 주러 한국대사가 배석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3. 10.

■ 中철강업계, ‘눈에는 눈’…美 농산물·전자제품에 보복조치 촉구(연합뉴스)

- 10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중국철강공업협회는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전자제품 등을 상대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협회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진행하는 보호 무역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파기하고 국제무역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세계 제철산업에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철강 소비자, 특히 미국 소비자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남도, 자기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2018. 03. 11.

■ **중 상무부장 “중미 무역전쟁은 모두에 재난”...“경제대화 지속”(연합뉴스)**

- 중 부장은 11일 베이징에서 가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중미 양국간 무역전쟁이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모두에게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주동적으로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도전이 있다면 이에 대응해 국가와 인민의 권익을 결연히 보위할 것이라고 말함.
- 중 부장은 무역은 중미 양국관계의 추진기(엔진)이며 수교 이래 40년간 양국 무역규모가 232배 증가했고, 투자규모가 누적기준 2천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경제의 보완성과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힘.

2018. 03. 14.

■ **“트럼프, 63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예정”(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최대 600억달러(약 63조9천억원)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로이터에 따르면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관세부과 조치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이뤄질 것이며, 애초 중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확대 적용돼 최종적으로는 100가지 품목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함.

■ **中, 트럼프의 대중 관세·투자·비자 압박 검토에 “결연히 반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 강화를 목적으로 무기한 관세와 투자 규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중국은 어떠한 일방적인 무역보호주의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미국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면 중국은 합법 권익을 결연히 보호할

- 것”이라고 밝히며, “경제 무역 협력은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임.
- 그는 “양국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공영이며 40여 년간 양국의 무역 협력은 양국과 양국민,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다”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중미 간에 무역 관련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를 건설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함.

■ **중외교부, 미국무장관 교체에 “북미 대화에 영향 없기를 희망”(연합뉴스)**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무장관 교체가 북미대화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최근 완화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루 대변인은 “이번 인선으로 인해 적어도 미중관계의 발전이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면서 “또 미중간 중요 영역에서 협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중국은 당연히 북한과 미국의 대화 의사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 추세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유관 각국이 대화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평화롭고 안정적이면서 비핵화된 한반도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덧붙임.

■ **미중, 이젠 금융 마찰?...中펀드 자금회수vs中은행에 돈세탁 경고(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 진출한 중국발 자본을 사이에 두고 금융 부문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부펀드는 11년간 물어뒀던 대미 투자금을 돌연 회수했고 미국은 중국 은행을 겨냥해 돈세탁 경고장을 날림.
- 13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미국의 대표적 사모펀드 블랙스톤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전면 매각함.
- 이 같은 움직임은 블랙스톤이 지난 1일자 공시에서 CIC가 지난달 22일을 기점으로 자사 지분을 더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감지되었고, 매각 이유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기상으로는 미중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한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매각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對中압박 3중세트 내놓나..“관세, 투자·비자제한 검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무기한(indefinite) 관세와 투자 규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조사결과에 근거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3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 300억 달러보다 많은 수치를 목표로 삼을 것을 지시했고,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2018. 03. 15.

■ **트럼프 관세폭탄에 ‘일전’의지 다진 中언론 “무역전쟁 대비해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600억달러(약 63조9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자 중국에서도 ‘일전불사’를 외치며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음.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5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과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인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서슬퍼런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미관계는 긴장과 공포의 경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함.
- 이 신문은 “중국도 무역보복에 나설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전략과 심리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미·일 관계

2018. 03. 11.

■ **EU·일-미국, 철강 고율관세 면제 합의 실패…“내주 계속 논의”(연합뉴스)**

-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10일 브뤼셀에서 3자 및 양자 통상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강행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회의에서 EU와 일본 측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EU와 일본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음.

2018. 03. 12.

■ **日관방 “아베, 방미시 트럼프에 납치문제 해결협조 당부할 것”(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다음달 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납치문제에 대해 특별한 당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으며, 스가 장관은 “당연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납치문제를) 확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연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8. 03. 13.

■ **日호위함, 美해항모 칼빈슨과 남중국해서 공동훈련…“中견제”(연합뉴스)**

- 일본 해상자위대는 헬기 탑재형 호위함 ‘이세’와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이 지난 11일 남중국해 북부에서 공동훈련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으며,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해군 함정도 수척 참가, 대열 확인과 통신 훈련을 했음.
- 남중국해에서 미·일이 훈련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를 진행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함.

2018. 03. 14.

■ **日 ‘틸러슨경질’ 당혹…“아베-트럼프 신뢰로 미일동맹 변화없다”(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 소식에 당혹해 하며 관련 정보 수집에 힘을 쏟았으며, 특히 후임으로 대북 강경론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내정된 것이 최근 급변하는 북한 관련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웠음.
- 외무성 간부는 “갑작스런 경질 사태라서 앞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놀란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함. 특히 외무성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이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곤혹을 포함.
- 이는 틸러슨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4월초 방미,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임.

다. 미·러 관계

2018. 3. 13.

■ 美하원 정보위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캠프-러시아 공모 없었다”(연합뉴스)

- 미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관리들이 공모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 지난 1년 동안 하원 정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는 별도로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해온 이들은 이날 배포한 조사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함.
- 공화당 측은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려고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한 것은 맞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를 도우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함.

■ 톰라슨 “스파이 암살 시도’ 독성물질은 러시아제…英 조사 신뢰”(연합뉴스)

-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암살 시도에 러시아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미국 정부가 신뢰를 표시하며 동조함.
- 12일(현지시간) AP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렉스 톰라슨 미 국무장관은 전용기에서 영국 스파이 사건에 사용된 독성물질은 “분명히 러시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우리에게 알려진 이 물질은 널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보유한 물질”이라며 러시아를 배후로 보는 이유를 설명함.

2018. 3. 15.

■ “미국, 러·중 제안 한반도 화해 지지 안보리 성명 초안 거부”(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제안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지지 성명 초안을 거부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14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아무런 논의도 없이 러-중 제안(성명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부한 미국의 결정은 현재의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비춰볼 때 워싱턴의 진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함.

- 대변인은 러-중 제안은 최근 남북한·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격 합의와 함께 이루어진 한반도 문제 해결 진전을 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함.

■ 미국도 러시아 때리기…“그들은 뉴욕서도 화학무기 쓸 수 있다”(연합뉴스)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 암살 시도’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그들은 뉴욕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책임을 거론함.
-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솔즈베리(영국에서 암살시도 사건이 일어난 곳)가 화학무기가 사용되는 마지막 장소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함.

2018. 03. 16.

■ 미, ‘대선개입·사이버공격’ 러시아 개인·단체 추가 제재(연합뉴스)

- 2016년 미 대선 개입을 이유로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미 대선개입과 각종 사이버 공격 등의 혐의로 러시아 개인 19명과 5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함.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정부는 러시아의 미 선거 개입 시도를 포함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과 중요 기반시설 침입 등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맞서고 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함.
-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군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 소속 해커들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19명 중 13명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로버트 풀러 특검이 지난달 기소한 러시아 인사들과 동일 인물임.

■ 미·영·독·프 정상 공동성명, 러시아에 스파이 사건 해명요구(연합뉴스)

- 영국에서 발생한 ‘러시아 이중스파이’ 살해 시도 사건이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 4개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 이들 서방 4개국 정상은 “러시아에 이번 공격과 관련한 모든 의문에 대처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영국의 자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우리 모두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힘.

라. 중·일 관계

2018. 03. 15.

■ 美에 당한 日, 韓·中에 화풀이?...“일부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기업이 자국에서의 판매 가격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해당 제품을 수출해 일본 기업에 손실을 안겨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함.
- 재무성은 전날 열린 심의회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시작할 계획이며,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자국 내 가격과 일본 수출가격의 격차를 바탕으로 최대 수출가격의 70%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8. 03. 13.

■ 일·러 영토분쟁 섬에 미국 기업이 발전소 건설 계획(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하나인 시코탄(色丹)섬에 미국 기업이 디젤 발전소를 건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정부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들 섬에서 러시아와 일본 이외 제3국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 러시아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NHK에 따르면 올레그 니콜라에비치 코제미야코 러시아 사할린주 지사는 12일 유지노사할린스크에서 현지 언론에 미국 기업이 올해 9월까지 시코탄섬에 디젤 발전소를 건설한 예정이라고 밝힘.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3.12	휴먼라이츠워치 “북 인권 책임자 처벌 조치 필요”(자유아시아방송)
	3.13	퀀타나 특별보고관 “북 핵 협상과 인권 대화 병행돼야”(미국의소리)
	3.14	OHCHR “북 인권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 추진”(자유아시아방송)
	3.16	일·EU, 북한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인권이사회 제출(미국의소리) 북한, 인권개선 검증 가장 쉬운 방법은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3.10	북 주민들, 장애 체육선수 존재 의심(자유아시아방송)
	3.13	北, 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지원중단에 항의 편지(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특이사항 없음
대북지원	3.16	세계기금 “북한이 훨씬 높은 투명성 보장해야 지원 재개 가능”(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3. 12.

■ 휴먼라이츠워치 “북 인권 책임자 처벌 조치 필요”(자유아시아방송)

- 국제 인권단체들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일부 긍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반 인도적 범죄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는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낙태와 성폭력, 강제 실종 등의 범죄를 종식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함.
- 국제앰네스티도 일부 유엔 기구와 협력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국제법상의 범죄를 자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하는 ‘이동의 자유’ 억압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국제앰네스티는 또 북한 당국이 외국에 있는 가족 등 외부세계와 손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날 열린 상호대화에는 이 외에도 유엔워치,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인권단체와 세계변호사협회(IBA),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PSCORE)’ 이른바 ‘성통만사’ 등이 참석해 종교박해와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 등 계속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우려를 표명함.

2018. 3. 13.

■ 퀴타나 특별보고관 “북 핵 협상과 인권 대화 병행돼야”(미국의소리)

- 토마스 오헤아 퀴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인권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함.
- 퀴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안보와 인권이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퀴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함.
- 북한의 광범위한 수용소 체계, 모든 형태의 표현과 이동의 자유,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제약이 계속 국가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임. 아울러 식량 불안정 등 기본적 필요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자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말함.

2018. 3. 14.

■ OHCHR “북 인권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 추진”(자유아시아방송)

- 케이트 길모어(Kate Gilmour) 부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 속개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구두 발표에 나섰다. 그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프로젝트(the Accountability Project for the DPRK)가 차근차근 진전되고 있다고 밝힘.
- 길모어 부대표는 북한 인권 관련 정보의 저장소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총 5명이 스위스 제네바와 한국의 서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번 조치가 지난해 3월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에 따른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함. 당시 결의는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 등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유린 정보와 증거를 저장하는 보관소(repository) 설치, 향후 책임자 처벌 과정을 위한 전략에 필요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설명 등을 분석하는 법률 전문가 임명 등을 권고함..
- 길모어 부대표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가 이 프로젝트팀을 이끌 고위급 전문가를 이미 임명했다고 밝힘. 또한 북한인권 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위해 사용될 정보를 보관할 ‘전자보관소(electronic repository)’ 설치 작업도 시작했다고 전함.

2018. 3. 16.

■ 일·EU, 북한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인권이사회 제출(미국의소리)

- 일본과 유럽연합이 15일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함.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힘. 북한 정부에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함.

- 특히 강제 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함. 또한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함.
- 아울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농르플르망 원칙, 즉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함.
- 이어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그러면서,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하라고 권고함.
- 이와 함께 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북한, 인권개선 검증 가장 쉬운 방법은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미국의소리)

- 북한이 인권 개선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함. 킹 전 특사는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킹 전 특사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북한을 포함해 유엔인권선언에 서명한 모든 나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이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또한 북한 당국의 정보 독점은 북한과 세계 다른 나라 간의 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뿐 아니라 관계 진전 측면에서도 정보 접근에 대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3. 10.

■ 북 주민들, 장애 체육선수 존재 의심(자유아시아방송)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7일 “지금까지 여기(북한)에서 장애인체육선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번 동계장애인올림픽에 어떤 선수들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을 정치적인 캠페니아(캠페인)로 이용하기 위해 급조된 선수들일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군복무와 대학시절을 합쳐 10년 넘게 평양에 살았지만 시내에서 장애자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평양에 장애인체육선수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함.
- 소식통은 또 “김정은시대에 들어서면서 부쩍 체육을 대중운동이라며 장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장애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그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적함.
- 소식통은 그러면서 “장애인으로 국가체육선수가 되었다면 ‘월미도체육단’이나 ‘압록강 체육단’과 같은 국가체육단 선수로 활약하다가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 선수로 나섰을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외 선천적 장애자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국가체육선수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함.

2018. 3. 13.

■ 北, 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지원중단에 항의 편지(연합뉴스)

- 북한 당국자가 ‘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하 세계기금)’의 최근 대북 지원중단 조치에 항의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형훈 북한 보건성 부상은 피터 샌즈 세계기금 집행국장에게 지난 10일 보낸 편지에서, ‘현 주기 세계기금의 협조를 2018년 6월 30일까지 종결하게 된다’는 내용의 지난달 22일 자 편지를 마크 에딩턴 세계기금 자금관리국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함.
- 김 부상은 “급작스러운 이번 협조중단 조치를 기금 측이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협조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도주의 협조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비판함.
- 그는 “결핵,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사업에서 일정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현 단계에서 기금 측이 그 후과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조중단을 통지해온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처사”라며 “이제라도 인도주의 사명에 맞게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힘.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5. 대북지원

2018. 3. 16.

- 세계기금 “북한이 훨씬 높은 투명성 보장해야 지원 재개 가능”(미국의소리)
 -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이 대북 지원을 중단한 이유와 재개 조건을 ‘VOA’에 자세히 설명함.
 - 이 기구의 시스 페이존 수석 공보관은 15일 ‘VOA’에 “최근 몇 년 동안 추가 안전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북한 특유의 운영 환경이 이사회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해 지원을 중단했다고 지적함.
 - 북한 내 자원 배치와 지원금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과 위험 관리 수준이 이사회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임. 페이존 국장은 세계기금이 3년 주기로 지원 기금을 운용한다며, 북한의 기금 요청을 평가한 결과 이런 이유로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함. 세계기금은 지난달 북한 보건성에 이런 이유를 설명하며 지원 중단 결정을 통보함.
 - 세계기금의 페이존 국장은 이에 대해 “장래에 북한에 대한 기금 지원이 재개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치와 기금의 효율성에 대해 훨씬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보증,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함.